

전후 일본에서의 일본정치연구의 한 단면: 이념에서 실증으로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전후 각 시기에 나타난 일본정치의 이론적인 설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일본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장점과 그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일본의 일본정치이론 변화에 영향을 준 연구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후 일본 정치연구는 마루야마 마사오에서 출발하여 관료지배론에서 일본형 다원주의론, 그리고 신 제도주의론으로 변화되었다. 우선 마루야마의 분석방법은 역사학, 사상사, 심리학, 민족학 등 광범위한 학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후 근대(明治)사(또는 일본정치사상사)연구와 일본 문화론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현실분석에는 인상 묘사적인 정치평론과 같은 정치 에세이에 매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마루야마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비판의 맥락은 1950년 이후 관료지배론으로 이어졌다. 관료지배론은 1950년대에 보수 세력의 재등장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하에서 일본 정치에서 통설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 등장한 일본형 다원주의론은 당시까지 타당하다고 여겨진 일본 정치의 관료지배론을 비판하면서 일본 정치를 서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즉 1970년대까지의 관료지배론이 일본 보수 세력의 재등장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일본형 다원주의론은 198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일본정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형 다원주의론의 이분법과 특수론을 지양한 연구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신제도주의론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 제도주의론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역사적인 제도론과 소위 합리적 선택론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본의 일본정치연구는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에서 점점 보편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I. 서론

일본정치의 변동과 더불어 정치학자가 설명하는 '일본정치상'도 변화되어 왔다. 각각의 이론적인 주장에는 역사적 시점에서 나타난 일본정치의 특징이 배어

져 있다. 일본의 일본정치연구를 살펴볼 때 각 시기마다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론적인 설명과 주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이론에 대항하여 계속적으로 반대 가설이 형성되면서 일본 정치연구는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여 갈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치에 대한 연구를 특수성(보편성), 긍정성(부정성)이라는 요소가 교차되면서 진행되어 왔다고 이해한다¹⁾. 즉 전후 초기에는 일본의 후진적인 정치질서를 강조하는 마루야마의 초현실주의적인 분석이 지배하였다. 마루야마의 일본정치에 대한 후진성 비판은 1950년대 전전 전후 연속론에 기초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 우위를 설명한 관료지배론(부정적인 특수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가 되면 일본정치연구는 관료지배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부정하는 일본형 다원주의론(긍정적인 특수론)이 영향력을 확보함에 따라 긍정적인 특수론이 일본정치연구에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형 다원주의론 이후 일본의 정치연구는 신 제도주의론의 도입에 따라 긍정적인 보편론이 지배하게 되었고, 미국의 수정주의 논의(부정적인 특수론)와 더불어 백가쟁명의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이라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본 연구자들의 이론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후 각 시기에 나타난 일본정치의 이론적인 설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일본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장점과 그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일본의 일본정치이론 변화에 영향을 준 연구에 한정하고자 한다.

II.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현실주의 분석

전후 일본 사회과학의 출발점이 마르크스주의 분석이었다고 한다면, 마루야마(丸山眞男)에 의한 천황제 파시즘 분석은 근대정치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마루야마의 일본 사회에 관한 해석은 일본적 특수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문화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루야마는 점령개혁의 성과를 거의 평가하지 않고, 전전 전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강좌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패전 직후의 일본적 상황 속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일본 지식인, 노동자들의 사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루야마도 이러한 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大嶽秀夫, 1994: 13-14). 그 당

1) 보편성(특수성)의 의미는 비교정치의 선상에서 보편적인 정치체제또는 행동으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고 긍정성(부정성)은 일본정치 발전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느냐의 문제이다.

시 강좌파는 일본(자본주의)의 특징을 봉건성, 후진성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노농파는 일본 파시즘을 후기 자본주의에 의한 제국주의라고 봄으로써 강좌파와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애초부터 강좌파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를 후진국 일본과 비교해서 미화 찬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 공산당의 점령군 규정에도 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강좌파적인 해석의 경향은 마루야마가 생각하는 일본 정치 문제에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첫 번째는 일본 특수론에 치우치는 경향이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요인을 경시해서) 국내적 요인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다.

마루야마 스스로도 전후 정치 분석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을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을 의식하여 그의 분석이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丸山, 1964). 마루야마는 재벌해체, 농지개혁, 헌법제정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의식 변혁을 실시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은 이전의 초국가주의(파시즘)라는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초 국가주의의 사상구조 내지는 심리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마루야마의 관심은 어떻게 일본의 전근대적인 정치(후진성)을 극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대주의적인 에토스에서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루야마는 1946년 “초 국가주의의 이념과 심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에서²⁾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하나는 사상적 접근으로 홉스 이후 유럽 사상사와의 비교를 주축으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라스웰 이후의 미국 정치학을 도입한 분석과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다³⁾. 이러한 사상사적 및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두 가지 방법의 병용을 통해서 일본 천황제 파시즘을 한편에서는 유럽 절대주의와 다른 한쪽에서는 나치즘과 비교하는 이중의 비교가 도입되었다.

마루야마 분석은 방법론적으로는 ‘일탈의 경우를 설명한 연구’라고 부를 만하다. 비교의 대상의 인용과 대조의 기준으로서 이용되었던 구미의 경우를 마루야마는 정상적인 사례로 보았고 일본의 경우는 일탈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마루야마가 강좌파의 분석 이상으로 부정적이고 특수한 일본론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2) 이 논문의 서술 방법상의 독특함과 좌익적이고 의식적으로 뽐을 낸 딱딱한 문체가 난무하는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문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표현과 문체로 인하여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소논문이다.

3) 후자에 대해서 마루야마는 당시 미국 정치학에 정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념을 기술했다고 후에 적고 있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천황을 향한 친근감에 의한 자기 이해와 천황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화」, 「억압의 이양에 의한 정신적 균형의 保持」라는 개념이 그 예일 것이다.

우선 마루야마에서 "유럽근대국가는 칼·슈미트가 말하듯이, 중성국가(中性國家)라는 큰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의 국가는 진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의 내용적인 가치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그러한 가치 선택과 판단은 오로지 다른 사회적 집단(예를 들면, 교회) 내지는 개인이 가진 양심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따라서 국가는 내용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순수함을 토대로 한 법 상에서 그 존재 의의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명치이후의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유럽과 같은 국가 주권의 기술적, 중립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주권자 스스로가 절대적 가치를 체현하여 윤리가 권력화 됨과 동시에 권력 또한 끊임없이 윤리적인 것에 자기의 지배 근거를 두려고" 했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일본 과시증화는 독일·이태리와는 달리 '위로부터의 과소화'가 '아래로부터의 과소화'를 이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군부, 관료, 재벌의 연합 체제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루야마는 나치즘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 군국주의자의 왜소성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전개한다. 마루야마가 말하는 왜소성이라는 것은 나치스들이 뉴런베르크 재판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정신에 자각적으로 도전한 니힐리스트의 명쾌함'을 보인 것에 비해,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이 동경 재판소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비굴함과 권한으로의 도피라는 소심한 태도를 보인 점에서 전형적인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권력 왜소화는 정치적인 권력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적인 국가를 배경으로 한 일체의 권력적 지배에서 나타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마루야마는 일본 군국주의자의 주체적인 책임의식의 결여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마루야마의 논문은 학문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치적인 폭로에 가까운 정치 비판이 전개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마루야마의 유럽과 일본의 비교(헤겔리안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는 일본의 초국가주의가 명치내쇼날리즘의 극한에서 형성되었다는 정치사상사적인 분석을 사용하였고, 또한 일본과 독일과의 비교는 동시대의 비교 정치 문화(또는 심리학)적인 분석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른바 마루야마의 논문에는 이질적인 분석 방법이 얽혀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루야마의 분석방법은 역사학, 사상사, 심리학, 민족학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근대(明治)사(또는 일본정치사상사)연구와 일본 문화론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활성화되고 그 깊이와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川島武宣, 1948; 神島二郎, 1961; 石田雄, 1970; 藤田省三, 1973; 綿實讓治, 1976; 京極純一, 1981). 그 예로 가미시마(神島二郎)의 귀향 이론과 京고쿠(京極純一)가 제시한 코스모로지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분석에는 대다수 정치학자가 외국에서 완성된 이론의 소개와 더불어 인상 묘사적인 정치평론과 같은 정치 에세이에 매몰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III. 관료지배론

마루야마의 전통을 이어받은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비판의 맥락은 1950년 이후 일본정치에서 통설적인 이론으로 발전한 관료지배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관료지배론은 1950년대에 보수세력의 재등장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하에서 다듬어졌다. 1950년대에 일본에서 관료지배론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1) 전전의 정치가들이 추방해제와 함께 정계에 복귀함과 동시에 보수당이 소위 역코스라고 불리는 정책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강한 비판의식이 존재하였다. 2) 1950년대의 사회상황은 고도성장의 영향이 침투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전전의 공동체적인 규제와 권위주의적 사회관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남아있었다. 3) 그 당시 지식인의 대부분은 야당, 노동조합과 함께 일본의 민주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강한 규범적 정치 실천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민주화 지향이 관료기구가 주도하는 근대화 노선에 비판적인 인식과 더불어 관료지배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일본 정치연구에서 고조되게 되었다.

관료지배론을 일관성 있게 지적한 학자는 즈지(辻 清明, 1969)였다. 즈지의 주장은 지배층에 의한 반동적 정책이 무엇보다도 전전과의 강한 인적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며 전후의 역코스정책은 특권적 고급관료에 의한 권력과 특권과의 옹호, 관료기구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즈지에 의하면 전후개혁을 통하여 일본의 관료기구가 온존할 수 있었던 이유로서 첫째 포츠담선언을 실시하기 위해서 점령당국이 간접 통치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명치유신 이후 국민 의식 속에는 관료의 중립적인 성격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세력이 통치의 지식,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관료는 정당을 대신해서 일본 정책결정의 중추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이해한다. 이 결과 전후 관료 엘리트는 1950년대 전전의 권력적 지배를 부활할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 복구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재건정비법(再建整備法)의 실시, 마을 합병의 강행, 더 나아가서는 지사관선론(知事官選論)과 지방제안의 주장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경찰제도에 대해서는 1951년에 시작한 경찰법개정,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로의 일원화, 국가공안위원회 원장의 각료화 등 또한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공선 폐지에 의한 국정교육으로의 재편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1950년대 일본 관료에 의한 역코스 정책 하에서 점령개혁으로 평등화된 공무원제도에서 다시 차별화 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한 고급관료의 특권과 내부의 비합리적인 복종관계는 다시 부활되었다고 즈지는 지적한다.

일본의 지배층에 대한 오카(岡義武, 1958)의 분석도 즈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 존재한다. 그도 일본 엘리트층의 문제점을 일본의 지배층 항복에서 비롯된 구체제 온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지배층은 점령개혁 하에서 미국의 옹호 하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강화 후에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하

여 구 체제 부활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층은 전전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전과 같이 전후에도 동질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의 지배층은 미국의 점령개혁 하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일본 독자의 규칙, 즉 전근대적 요소에 근거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층의 반동적인 성격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반공체제 하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독자의 전통적 반(反)공산주의가 다시 부활되었다고 설명된다. 오카는 즈지와는 달리 일본 마르크스주의의 강좌파적인 정치인식에서 출발하면서도, 전후 정치의 해석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자율성을 강조한 노농파의 해석에 접근해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즈지와 오카의 전전연속론과 결부된 관료지배론의 주장은 197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 대부분의 관료지배론은 우선 즈지의 전전연속론을 특별한 실증조사 없이 받아들였고, 관료가 정책의 형식적인 제안자이며, 또한 관료가 법안의 기초자라는 것에서 관료제의 역할이 다른 액터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 정당의 정책능력 결여도 관료지배론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즉 관료의 숙련과 정보 대 정당의 무능화-의회가 가진 심의 판단력의 저하라는 일반적인 관찰이 관료지배론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셋째 관료지배론의 근거로서 대부분의 관료출신자가 자민당의 의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더구나 전후 역대 내각의 구성을 보면 관료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도 관료지배론을 지지해 주는 근거가 된다.

관료지배론의 연구 특징은 대체로 1) 방법론적으로는 역사적인 접근이 강하고 실증적인 분석보다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 2) 전전의 정치체제의 온존과 강화를 지적하면서 관료제가 권력의 중추에 있다고 파악한다. 3) 정책형성을 관료제를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결정의 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이들도 정치의 새로운 요소로서 자민당과 의회, 그리고 대중사회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책형성에는 이들의 영향력을 상정하지 않는다.

관료지배론의 영향은 그 당시의 다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익집단의 연구를 한 이시다(石田雄, 1960)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시민(이익집단의 결정 등)의 자발성 결여와 관료지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시다는 일본의 이익집단은 성원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형성된 단체가 아니라고 보면서 일본의 이익집단의 특징은 단지 같은 지역, 같은 직장에 있는 자체만으로 구성된 이질적 성원의 집합이라고 파악한다. 따라서 정치가는 이익집단의 대표로서 국회에 보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당은 영국의 정당과는 달리 정책의 조정능력이 없고, 관료가 정책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활동도 정당이 아니라 관료기구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따라서 이익매개의 수단은 관료기구와 이익집단의 지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밀담이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시다의 결론은 일본의 이익집단은 다원적 민주

주의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며, 이익단체는 관료에게 포섭됨으로서 자율성이 상실되었다고 파악한다.

IV. 일본형 다원주의론

1980년대에는 1950년대 또는 60년대 초기에 타당하다고 여겨진 일본 정치의 관료지배론이 대부분 비판되어졌으며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으로 는 현실이 변화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분석의 방법과 이론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1980년대 발생한 정치 상황의 변화는 (1) 자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당 우위체제의 확립, (2) 국회, 관료기구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 확대, (3) 경제적으로는 저 성장화가 지속됨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 또한 대폭적인 재정 적자, (4) 국제화, 고도 기술화의 진행과 함께 대두되는 이해 대립과 갈등 등이 주요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의 연구자들은 이전의 정치체제 비판에서 벗어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또한 1980년대는 정치학자의 세대교체가 나타나면서 일본정치연구의 새로운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즉 무라마츠(村松岐夫), 오오타케(大獄秀夫), 그리고 이노쿠치(猪口孝)를 중심으로 1) 일본정치를 역사나 사상사보다는 현대정치학의 체계적인 수용을 통하여 통설을 비판, 2) 평론적이고 인상주의적인 비판에서 탈피하여 실증주의적인 연구의 강조 3) 일본정치를 특수한 일본적인 분석 틀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분석 틀의 도입을 통한 일본적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일본정치의 반체제적인 비판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자민당 정무 조사회와 국회대책위원회, 법안 성립의 전체상, 관료와 정치가의 상대적 영향력, 또는 이익 집단의 역할 미시적인 제도와 정책 행위자 등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들도 주로 신문기자나 평론가, 정치가의 인상론, 견문기를 넘어서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정치학자들은 전전의 정치적인 비판 의식에서 탈피하여 정치과정과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관료지배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된 시초의 작품은 무라마츠(村松岐夫)가 쓴 『戦後日本の官僚制』(東洋經濟新聞社, 1981)이었다. 이 책 이전에도 무라마츠는 관료제 조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발표하기는 했었지만, (예를 들면, “政治的多元主義と行政官僚制” 『法學セミナー増刊---内閣と官僚』(1979/3), 이 논문은 일본 정치를 일본형 다원주의 입장에서 본 선두적인 업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미일섭유분쟁을 중심으로 다루었던 오오타케(大獄秀夫)의 『現代日本の政治權力經濟權力』(三一書房, 1979)의 발표가 먼저이지만, 논쟁에 부여된 영향과 그 후의 논의의 흐름으로 본다면, 무라마츠의 주

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라마츠는 (1) 관료기구가 점령기에 온존된 것에 의한 전전전후연속론(戰前戰後連續論), (2) 법안(예산)의 실질적 제안자, 기안자와 관련된 관료 자질과 정보 양에 의한 관료우위설, (3) 자민당은 관료출신자가 많음으로서 출신관청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행동설에 대해 관료와 정치가의 인터뷰 데이터를 근거로 기존의 이론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무라마츠 조사에 응답한 관료는 현실과는 다른 형식적인 대답을 진술했을 뿐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정치가 우위를 주장하는 획기적인 반론을 주장하였다.

무라마츠에서 시작된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의 관심은 민간의 이익대표로서 정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점에서 미국의 다원주의론과는 달랐다. 즉 변화하는 정책요구에 자민당의 대응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일본형 다원주의자의 공통적인 해답은 첫째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지속함에 따라 자민당 정치가가 정책적인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고 둘째 자민당내의 제도화로 인해 자민당이 정치권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1970년 이후 사회적 경제적인 급격한 변화와 관료기구간의 대립은 더 이상 관료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한다.

일본형 다원주의자의 분석은 주로 관료와 여당간의 정치형성과정에 집중하면서 자민당의 영향력과 관료의 영향력을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자민당 정치가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노구치(猪口孝)는 “관료적 포괄형 다원주의”의 모델을 제기하고, 무라마츠(村松岐夫)와 크라우스는 “정형화된 다원주의”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사토(佐藤誠三郎)와 마츠자키(松崎哲久)는 “자민=관청 혼합체로의 방향으로 된 다원주의”라 부르는 것에서도 그들간의 차이는 분명하다⁴⁾.

이노구치가 말하는 “관료적 포괄형”이 의미하는 바는 “관료주도”와 “대중 포괄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조합됨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 “대중 포괄적”이라는 것은 “시민을 관청의 관할 하에 편입시키려는 경향, 사적 이익을 관료기구라는 틀 안에서 우선 시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관료지배론 보다는 관료기구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논자에 비해 관료기구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무라마츠와 크라우스의 경우는 관료기구의 역할을 정당 정치의 대립과정에서 구조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노구치 만큼 관료기구를 강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익 집단은 관료기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집단의 자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부(관료기구)와 갈등을 빚는다. 무라마츠와 크라우스가 말하는 일본적 특징은 정부와 이

4) 그이외에도 大巖秀夫는 미국과 비슷한 의미의 다원주의 입장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분석적 개념에는 다양한 형용사가 붙는 “다원주의”의 모습이 등장한다.

익집단간의 연계가 자민당에 관련된 이익집단과 사회당에 연관된 이익집단간에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토와 마츠자키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인 “자민=관청 혼합체로의 방향이 결정된 다원주의”는 코포라티즘보다는 유연하고, 미국형의 다원주의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사토와 마츠자키는 이노구치보다는 자민당의 역할을 중시하고, 무라마츠와 크라우스보다는 관료의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은 정치가의 영향력 분석과 관련하여 관료지배론자와는 달리 실증적인 연구 축적에 노력하였다. 그들의 성과는 주로 우선 자민당 정책과정의 중심으로서 자민당 정무조사회와 족의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왔다. 자민당내의 정무조사회와 족의원에 대한 관심은 저널리스트와 실무가로 부터 매번 지적되어 온 주제였지만(日本經濟新聞社, 1983; 木代泰之, 1985; 村川一郎, 1979), 가장 체계적으로 자민당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과 구조에 대해 논했던 것은 사토(佐藤誠三郎)와 마츠자키(松崎哲久)가 집필한 『自民黨政權』(中央公論社, 1986)일 것이다. 저자들은 자민당의 장기 정권이 초래한 제도화의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 책에서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부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어느 정도였는가 또는 국회에 제출 통과는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통계는 밝히지는 못했지만, 자민당 정치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 축적을 통하여 자민당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노구치(猪口孝)와 이와이(岩井奉信)의 『族議員の研究』(日本經濟新聞社, 1987)는 족의원이 갖는 두 가지 얼굴 즉 정책분야의 전문가라는 것과 특정 정책 영역이 갖는 이익의 대변자라는 기존의 해석에 대해 정치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명확히 한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의 초점은 족의원과 관료기구와 이익 단체간의 관계였다. 이들 관계를 통하여 자민당내의 족의원의 유형과 그들의 행동 패턴이 일본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노구치와 이와이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당의 영향력이 시기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섹터별로 다른 정치적인 개입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익 집단에 대한 논의도 상당한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이익집단에 대한 일본형 다원주의자의 체계적인 논의는 오타케(大嶽秀夫)의 『現代日本の政治權力經濟權力』(三一書房, 1979)일 것이다. 오타케는 미일 섬유교섭(자동차 문제도 포함)에 있어서 재계(財界), 업계(業界)의 움직임을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국제 정치와 국내정치의 정치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타케는 섬유업계의 반발과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다원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익집단론은 무라마츠(村松崎夫), 이토우(伊藤光利), 츠지나카(辻中豊)의 『戦後日本の壓力團體』(東洋經濟新報社, 1986)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이익집단은 어떤 형태가 존재하고,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정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익집단을 (1) 섹터 단체(전문가단체, 경제 단체, 농업

단체) (2) 정책수익단체(교육단체, 행정관계단체, 복지단체) (3) 가치추진단체(노동단체, 시민 정치단체)의 세 종류의 형태로 분류하고 이것을 기초로 252단체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익집단의 정책추진과정에서는 행정기관에 접촉할 유형, 정권당의 네트워크를 갖는 유형, 야당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유형 등이 발견되면서 일본 정치를 “일당우위의 다원주의 체제”라고 파악하였다.

V. 일본형 다원주의 이후: 신제도주의론

1970년대까지의 관료지배론이 일본 보수세력의 재등장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일본형 다원주의론은 198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일본정치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비판적인 논의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의 연구축적의 결과에서 나타난 새로운 방법론적인 도전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일본형 다원주의자에 대한 비판은 첫째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를 제로점으로 해석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논의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정치 현상을 보편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일본형 다원주의론이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특수론에 빠지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형 다원주의론 이후의 논의는 이분법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가 등장하고(예를 들면, 역사적 제도주의론), 또한 일본적 특수한 현상에서 보편적인 설명을 도출하기보다 보편적인 분석 틀에서 일본의 정치를 설명하려는 특징(예를 들면, 합리적 선택론)을 지니고 있다.

일본형 다원주의론의 이분법과 특수론을 지양한 연구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신제도주의론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신 제도주의론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우선 국가주의론을 수정한 역사적 제도주의론(通渡展洋, 1991)이다. 이것은 국가를 액터(actor)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운용양식을 보완하는 여러 조직이나 규칙의 전체 구조로서 국가를 파악하며, 이러한 총체적인 구조(즉 제도)가 사회세력의 행동양식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종래의 국가주의론이 국가의 자립적 의사형성 능력에 중점을 두어 국가의 강력함을 이해하려는데 대해, 역사적 제도주의론은 국가의 강력함을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적 구조의 제약성으로부터 측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역사적 제도주의론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직되어진 시장”과 정치적 개입의 상호작용으로서 전후 경제발전을 해명하려고 했던 히와타리⁵⁾(通渡展洋, 1991)와 복지국가론에 의거하여 일본 전후 사회보장제

도의 발전과 변천을 정치경제측면에서 분석한 신가와(新川敏光, 1993), 그리고 일본 전후 금융제도의 형성에서부터 현재의 재정위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마부치(マブチ勝, 1994)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 특징은 관료 정치가간의 상호적 우위관계에서 일본정치를 규정하려고 하였던 종래의 연구와는 달리 일본 정치를 비교정치의 사례로서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도 국가, 관료기구,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개념을 분석의 중심에 두고는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종래의 관료지배론이나 정치가우위론 등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히와타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치·경제적으로 조직되어진 시장의 조정력을 강화시켜 정치적인 동원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히와타리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닛지 라인 이후 1950년대를 통하여 이러한 대립이 ‘조직되어진 시장’이라는 시장제도에 의해 조정되어졌다고 말한다. 즉 제조업 부문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간에는 계열화가 진행되어, 양자의 이해관계가 계열이라는 ‘조직되어진 시장’에서 조정되어진 결과, 전통산업의 정치적 동원력은 저하되었다. 노사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업별 조합과 춘투라고 하는 ‘조직되어진 시장’속에서 갈등이 해소되어짐에 따라 노사분쟁이 정당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한 당파적인 정치적인 동원은 억제되었고, 정당 시스템내의 갈등은 안전보장 관련 정책에 편중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히와타리의 주장은 정부 대 시장의 대립 축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정치경제연구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가와도 시장제도(혹은 시장조직)를 중시하는 히와타리와는 달리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회적인 권력관계를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 신가와의 가설은 “사회정책은 노동과 자본의 제도적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되어진다”라는 것이었다. 즉 사회정책이 종속 변수이며 제도적인 권력관계가 독립변수이다. 신가와의 특징은 각 국의 복지정책의 차이를 지배연합의 정치적인 당파성(좌익정당인가 우익정당인가 분류의 포인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에서 탈피하여 노동세력의 강약 즉 자본과 노동의 제도적인 권력관계에서 설명하려고 한 점이다. 신가와는 이러한 관점에서 1960년대까지의 일본은 위약한 노동과 강력한 자본의 관계를 반영한 보수연합(자민당정부, 국가관료, 자본사이에 자본축적을 목적으로 한 권력연합)이 형성됨에 따라 최소한 공적 복지가 나타난 잔재적인 복지국가의 시대였다고 파악한다. 1970년대에는 보수연합의 위기에 의해

5) 히와타리는 산업의 고도화의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인 대립축이 어떻게 일본의 정치경제 속에서 조정되어 갔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대립축은 첨단산업과 전통산업(농업을 포함)의 대립, 노동과 자본의 대립, 산업화 세력과 탈산업화 세력(신중간층)의 대립을 말하며, 이러한 대립의 특징이 각국의 정치 경제를 특징 지운다고 주장하였다.

복지정책이 급성장하여 제도적인 복지국가가 보여졌던 시대, 그리고 1980년대에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혁신 자치제, 좌익 노동세력, 등)의 쇠퇴에 의해 복지정책의 개정(신보수주의적인 전략)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신가와와 연구는 다원주의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복지국가의 質의 문제를 정치경제와 결부시켜 설명한 선구자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부치는 광범위한 사회의 제도를 강조하는 히와타리와 신가와와의 논의와는 달리 좁은 의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국가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마부치는 일본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재정제도의 정치화와 금융제도의 종속이라는 국가제도의 비대칭성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마부치의 논의의 출발은 일본의 재정, 금융제도가 전후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준비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전의 재정제도는 의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었지만, 전후는 재정에 대한 의회 배제의 원칙이 점차 철폐됨으로써 정치가의 영향력의 증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재정 특히 세출예산의 형성과정에서는 자민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비해 금융의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전전의 대장성 통제가 유지되게 되었다. 이것은 ‘재정과 금융의 일체성’을 주장하는 대장성과 조직해체를 우려한 일본은행의 저항에 의해 정당화되어 갔으며, 이후 대장성은 재정운영의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을 운용하게 되었다. 이 결과 정치화된 재정결정에 의해 국가의 차입금이 증대하였을 때, 재정에 종속된 금융제도는 국채의 시장 소화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되어 재정위기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마부치의 논의는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하였던 대장성의 역기능적인 역할을 새롭게 부각시킴으로서 기존의 관료지배론보다 정교한 설명방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신 제도주의론의 의의는 관료지배, 정치가우위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제도의 측면에서 일본 정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신 제도주의론의 두 번째 어프로치는 소위 합리적 선택론으로부터 형성된 것이었다. 합리적 선택론은 일정의 제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재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개 정치가의 합리적 행동에 주목한다(加藤淳子, 1997). 합리적 선택론은 자민당 내에 리더십을 갖지 않는 초선의원이나 중견의원들의 재선욕구를 통하여 자민당의 정치가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론자는 주인과 대리인(Principal-Agent) 이론을 일본정치연구에 응용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선 선거민 또는 주요한 이익집단은 여당원이 그들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정책형성을 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이것에 대응하여 선거기반이 약한 일반 의원들은 선거민의 이익을 당의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의 리더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그리고 당의 리더는 관료가 당의 방침에 따라 정책형성을 행하도록 감시와 감독을 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의 결과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해석되며, 일본정치에서는 자민당이 관료에 정책형성을 위임한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자신의 재

선을 확보하려는 정치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며, 이러한 단순한 변수에서 합리적 선택론은 모든 정치행동을 설명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의 정책형성과정에 나타나는 관료의 광범위한 영향력은 자민당이 정책형성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관료에게 위임하였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론은 일본형 다원주의론의 입장에서 그려진 시민·단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가라고 하기보다는 이기적인 행위 목적으로 정책 결정을 조정하는 정치가로 그려져 있다. 일본형 다원주의론에서 말하는 정치가 우위론은 이미 다루었던 여러 조건의 교차(예를 들면, 일본사회·경제의 성숙과 국제화에 더불어 수반되는 정책 이슈의 복잡화, 여러 관청간의 갈등, 정치가의 민의 대표성과 정책 형성능력의 향상)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지만, 합리적 선택론에서는 제도상에서 정치가 우위는 당위적인 것으로서 관료는 정치가가 정한 방침으로 따르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액터간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다⁶⁾. 물론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제도가 정치행위자의 관계를 규정지어 주는 구조라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제도주의적인 접근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논의와 일본적 다원주의론의 특수론적인 설명의 함정에서 벗어나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일본형 정치의 특성과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VI. 한국의 일본연구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일본의 일본정치연구는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에서 점점 보편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일본정치연구가 나름대로의 역동성을 가지고 시대적인 고민에 부합하려했던 학문적인 노력은 한국의 일본정치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일본정치연구에서 보이는 실증주의적인 연구의 축적은 한국의 일본연구가 지향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마루야마의 초현실주의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결코 천재의 우연성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일본 사회과학이 축적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일본형 다원주의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단지 미국 이론의 수입의 결과라고 치부하기에는 꺼림칙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의 실증적인 연구의 기반은 광범위하게 일본 내에 축적되어온 정치사의 전통과 역사학 기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실증주

6) 카토(加藤淳子, 1996)가 지적한 것처럼 신 제도주의론의 두 가지 어프로치는 반드시 상호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가 제도적 제약의 측면에서 보았다면 후자는 그 중에서의 인간이나 인간집단의 선택과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의적인 태도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 1980년대 일본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사례축적에 매몰된 나머지 이론개발이나, 전체적인 정치상을 그려내지 못하는 한계는 동전의 어두운 면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험적인 사례의 축적 없이는 이론의 개발도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하나 일본의 일본연구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점은 개인의 창조성과 집단적인 노력이 합치되는 부분이다. 일본연구자들은 마루야마 이후의 많은 제자들이 마루야마의 현실인식을 뛰어넘은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1980년대의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적극성과 동시에 집단적인 노력을 통한 학문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일본정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는 나름의 성과를 가졌다. 그 예로 1987년에 동인지의 성격으로 창간한 ‘레비아아산’을 들 수 있다. 레비아아산의 그룹들은 잡지를 통하여 현대 일본정치의 흐름을 좌우하는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학문적인 진지함을 이룩해 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정치연구내의 경쟁이 활성화되었고 안이한 연구나 평론 수준의 논문은 일본정치연구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정치학내 광범위한 형태로 존재하는 연구회(벤쿄가이)도 원활한 정보공유와 학문내의 경쟁에 공헌을 함으로서 일본연구를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일본연구가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마루야마 이후 1960년대에는 일본 정치연구의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해외의 이론의 도입과 실증적 연구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는 사례연구에 집착함으로써 거시적인 정치의 흐름을 도외시하는 한계가 존재하였고 또한 외국(특히 미국)정치학의 도입을 통한 이론 적용은 이론의 수입 열병이 번지면서 의미 있는 독자적인 연구가 생성될 수 없는 문제점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의 정치연구가 극복해 할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일본연구자들은 일본의 일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현실 인식과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달리 고민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일본정치연구에서는 마루야마를 비롯한 일본의 초기 세대들이 천황제 과시즘의 비판에서 일본사회과학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전통 하에 1950년대의 연구자들은 그 당시 진행되었던 역코스정책과 보수세력의 회귀를 관료 지배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일본형 다원주의자들은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른 일본 정치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일본지식인의 일본정치에 대한 고민과 해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일본 연구자들이 일본의 고민과 해석에 만족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본 나름의 지적 고민은 일본적인 상황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연구자가 공유할 부분과 공유하지 못할 부분 즉 일본인만의 특수한 문제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한국에서 일본연구자는 일본의 어떠한 현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갖는 의미를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I·M·데슬러, 佐藤英夫編, 1982. 『日米經濟分争の解明』, 日本經濟新聞社.
- 石川眞澄, 1978. 『戦後政治構造史』, 日本評論社.
- 石川眞澄·廣瀬道貞, 1989. 『自民黨:長期支配の構造』, 岩波書店.
- 石田 雄, 1960. 「わが國における壓力團體發生の歴史的條件とその特質」, 日本政治學會編, 『日本の壓力團體』, 岩波書店.
- , 1961. 『前後日本の政治體制』, 未來社.
- 石田博英, 1963. 「保守黨のビジョン」, 『中央公論』.
- 伊舟敬之編, 1993. 『日本の企業システム』, 有斐閣.
- 伊藤大一, 1980. 『現代日本の官僚制分析』, 東京大學出版會.
- 猪口 孝, 1983. 『現代日本政治經濟の構圖 政府と市場』, 東洋經濟新報社.
- 猪口 孝·岩井奉信, 1987. 『族議員の研究』, 日本經濟新聞社.
- 猪口 孝·大嶽秀夫·浦島郁夫·村松岐夫編, 1987~1991. 『レヴァイアサン』, 1號~9號, 木鐸社.
- 今井賢一, 1976. 『現代産業組織』, 岩波書店.
- , 1984. 『情報ネットワーク社會』, 岩波書店.
- 居安 正, 1983. 『政黨派閥の社會學』, 世界思想社.
- 内田健三, 1969. 『前後日本の保守政治』, 岩波書店.
- 大嶽秀夫, 1979(a). 『現代日本の政治權力經濟權力』, 三一書房.
- , 1979(b). 「日本政治の研究における比較の方法」上·中·下, 『UP』, No.77, 78, 80.
- , 1981. 『日本の防衛と國內政治』, 三一書房.
- 編, 1984. 『日本政治の争點』, 三一書房.
- , 1986. 『アデナウアーと吉田茂』, 中央公論社.
- , 1987-1988. 「戦後政治と政治學」①~⑪ 『UP』, No. 177, 178, 179, 180, 181, 183, 185, 186, 187.
- , 1994. 『戦後政治と政治學』, 東京大學出版會.

- 大山耕輔. 1996. 『行政指導の政治経済学』. 有斐閣.
- 岡 義武編. 1958. 『現代日本の政治過程』. 岩波書店.
- 岡崎哲二編. 1993. 『現代日本経済システムの源流』. 日本経済新聞社.
- 河野康子. 1993. 「吉田外交と国内外交」. 日本政治学会編. 『戦後日本国家の形成と経済発展』. 岩波書店.
- 神島二郎. 1961. 『近代日本精神構造』. 岩波書店.
- 基礎経済科学研究所編. 1992. 『日本型企业社会の構造』. 労働旬報社.
- 京極純一. 1968. 『政治意識の分析』. 東京大学出版会.
- , 1983. 『日本の政治』. 東京大学出版会.
- 香西泰. 1981. 『高度成長の時代』. 日本評論社.
- 小宮隆太郎編. 1984. 『日本の産業政策』. 東京大出版会.
- 執筆代表/依田 博. 1988. 『政治』. 有斐閣.
- 榊原英資・野口悠紀夫. 1977. 「大藏省・日銀の分析」. 『中央公論』. 8月号.
- サカキバラ英資. 1990. 『資本主義を超えた日本』. 東洋経済新報社.
- サカキバラ・野口. 1978. 「大藏省, 日銀王朝の分析」. 『中央公論』. pp. 96-115.
- 佐藤英夫・I・M・デスラー編. 1982. 『日米経済分争の解明』. 日本経済新聞社.
- 佐藤誠三郎・公文俊平・村上泰豪. 1977. 「脱“保革”時代の到来」. 『中央公論』. 2月号.
- 佐藤誠三郎・松崎哲久. 1986. 『自民党政権』. 中央公論社.
- スカラピーノ・升味準之輔. 『現代日本の政党と政治』. 岩波書店.
- 新川敏光. 1989. 「デュアリズムと現代日本の政治」. 『レヴァイアサン』. 第5号.
- , 1993. 『日本型福祉の政治経済学』. 三一書房.
- 新藤宗幸. 1989. 『財政破綻と税制改革』. 岩波書店.
- , 1992. 『行政指導: 官廳と業界のあいだ』. 岩波新書.
- 眞淵 勝. 1981. 「再分配の政治過程」. 高坂正堯編. 『高度産業国家の利益政治過程と政策 一日本一』. トヨタ財団學術奨励金報告書.
- , 1989. 「大藏省主税局の機關哲學」. レヴァイアサン. 第4号. 木鐸社.
- 曾根泰教. 1986. 「日本の政策形成論の變化」. 中野實編. 『日本型政策決定の變容』. 東洋経済新報社.
- , 1987. 「變わる政治・變わる政治学」. 『レヴァイアサン』. 1号. 木鐸社.
- 高島通敏. 1980. 『現代日本の選挙と政党』. 三一書房.
- 高坂正堯編. 『高度産業国家と利益政治過程と政策』. トヨタ財団報告書.
- , 1965. 『宰相吉田茂』. 中央公論社.
- 田口富久治. 1961. 『日本の革新勢力』. 弘文堂.
- , 1969. 『社会集團の政治機能』. 未來社.
- 田中善一郎. 1981. 『自民黨體制の政治指導』. 第一法規.

- 恒川恵市. 1996. 『企業と國家』. 東京大學出版會.
- 辻 清明. 1969. 『新版 日本官僚制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辻 中豊. 1988. 『利益集團』. 東京大學出版會.
- 「特集・自民黨」. レヴァイアサン. 第9號(1991). 木鐸社.
- 「特集・内閣と官僚」. 1979. 『法學セミナー増刊』. 9.
- 「特集・比較政治體制論」. 1988. 『レヴァイアサン』. 3號.
- 鶴田俊正. 1982. 『戦後日本の産業政策』. 日本經濟新聞社.
- 通渡展洋. 1991. 『戦後日本の市場と政治』. 東京大出版會.
- 通渡展洋. 1995. 「55年政黨制變容の政官關係」. 日本政治學會編. 『現代日本政官關係の形成過程』. 岩波書店. pp. 77-105.
- 通渡由美. 1990. 『戦後政治と日米關係』. 東京大出版會.
- 富森叡兒. 1977. 『戦後保守黨史』. 日本評論社.
- 中邨 章・竹下讓編. 1984. 『日本の政策過程』. 梓出版.
- 中根千枝. 1967. 『タテ社會の人間關係』. 講談社.
- 中野 實編. 1986. 『日本型政策決定の變容』. 東洋經濟新報社.
- 中村隆英編. 1979. 『占領期日本の經濟政治』. 東京大學出版會.
-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1974. 『戦後改革』. 東京大學出版會.
- 西村吉正編. 1994. 『復興と成長の財政金融政策』. 大藏省印刷局.
- 西尾勝, 村松岐夫編. 1994. 『講座 行政學:政策と行政 3』. 有斐閣.
- 日本經濟新聞社. 1983. 『自民黨政調會』. 日本經濟新聞社.
- 日本政治學會編. 1967. 『年報政治學1967:現代日本の政黨と官僚』. 岩波書店.
- 日本政治學會編. 1979. 『年報政治學1977:五五年體制の形成と崩壊』. 岩波書店.
- 日本政治學會編. 1988. 『年報政治學1987:政治過程と議會の機能』. 岩波書店.
- 浜口恵俊・公文俊平編. 1982. 『日本的集團主義』. 有斐閣.
- 廣賴克哉. 1989. 『官僚と軍人 文民統制限界』. 岩波書店.
- 廣瀨道貞. 1981. 『補助金と正權黨』. 朝日新聞社.
- 樋渡展洋. 1991. 『前後日本の市場と經濟』. 東京大學出版會.
- 橋本ジュロウ編. 1995. 『20世紀資本主義1』. 東京大出版會.
- 林川英正編. 1995. 『高度成長を超えて』. 岩波書店.
- 福井英雄, 形野清貴, 上田惟一, 岡村茂, 川端正久. 1988. 『日本政治の視覺』. 法律文化社.
- 福井治弘. 1969. 『自由民主黨と政策決定』. 福村出版.
- 升味準之輔. 1969. 『現代日本の政治體制』. 岩波書店.
- マブチ勝. 1994. 『大藏省統制の政治經濟學』. 中央公論社.
- 丸山眞男. 1964. 『増補版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 三宅一郎・山口定・村松崎夫・進藤榮一. 1985. 『日本政治の座標—戦後40年の歩み』. 有斐閣.

- 三輪芳郎. 1990. 『日本の企業と産業組織』. 東京大學出版會.
宮崎義一. 1992. 『複合不況』. 中公新書.
村上泰豪. 1984. 『新中間大衆の時代』. 中央公論社.
村上泰豪・公文俊平・佐藤誠三郎. 1979. 『文明としてのイエ社会』. 中央公論社.
村川一郎. 1985. 『日本の政策決定過程』. ぎょうせい.
村松崎夫. 1981. 『前後日本の官僚制』. 東洋經濟新報社.
村松崎夫・伊藤光利・辻中豊. 1986. 『前後日本の壓力團體』. 東洋經濟新報社.
木代泰之. 1985. 『自民黨稅制調査會』. 東洋經濟新報社.
森田 朗. 1988. 『許認可行政と官僚制』. 岩波書店.
山口二郎. 1987. 『大藏官僚支配の終焉』. 岩波書店.
綿實讓治. 1976. 『日本政治の分析視角』. 東京大學出版會.
渡邊治. 1991. 『企業支配と國家』. 青木書店.

A Research on the Japanese Politics in Japan in the Post-War Era: from the Ideology to the Positivism

Chang-Soo Jin
Sejong Institu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limits for the academic development of the Japan studies in Japan through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theoretical approaches toward the Japanese politics in the post-war era.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s specified to the works that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political theories in Japa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tudies on the Japanese politics begin with Maruyama Masao and have changed from the state-dominant model to the Japanese Pluralist model and eventually to the New Institutionalism. First of all, the Maruyama's analytical methodology tends to make an academic overview of historical,

ideological, psychological and ethnical factors. This methodology became popularly used in the analysis of the modern history and culture of Japan. However, it has a propensity to fall into descriptive political critiques and political essays in analyzing the current issues. Following the Maruyama's tradition, the stream of critiques toward the backwardness of the politics is followed by state-dominant model after 1950s. The state-dominant model has dominated in describing the Japanese politics due to its critical analysis on the reappearance of the conservative power in 1950s. In 1980s, a new thinking of the Japanese Pluralist model has emerged by applying a western framework against the existing state-dominant model. In contrast to emphasizing the critical aspects of the reappearing conservatives, the Japanese Pluralism e state-dominant model explains the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s along with the economic transformation. Nevertheless, the research focusing on the dichotomy of the Japanese Pluralist model and its peculiarities is originat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New Institutionalism. The New Institutionalism is characterized into two separate theoretical approaches,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the rational choice theory. The research methodology on the Japanese politics in Japan has changed from emphasizing critical analysis on the ideology to the positivism.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Tel. 031-715-7870(H)/031-750-7535(O). E-mail: csjin@sejong.org